

김용민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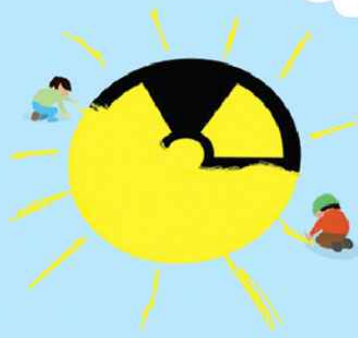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아름다운재단	02-766-1004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속성! 최고의 맛은 알싸한홍어	1599-6456, 010-9384-7970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정성농장홍삼	041-754-0884, 010-9754-6972 jeongseongfarm.com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개 대게직거래장터	1644-9047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 다이어트 쇼플론은 비타샵	031-783-6007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미공장사랑	070-4115-0365, 010-2892-0365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수아비스화장품	1688-9113, 031-717-1613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풍무양고기	031-902-9292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매트리스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내피알	032-519-4800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텍스점	facebook.com/tartfarm13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이담채김치	1544-4586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전창걸의새싹공차	070-8635-1288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좋은사람과플라워	1566-0263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02-849-9730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와우전복	010-2443-0818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연지연곰탕	010-7252-1114, 031-989-9968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행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촛불 끝 꿈수 말고 퇴장하라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朝鮮日報

2016년 12월 05일
39면 (오리나년)

朴 대통령 '4월 퇴진' 표명하면 국가 위기 고비 넘는다

새누리당이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 4월 말 퇴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4월은 여야를 막라한 정계 원로들이 정한 퇴진 시한이다. 대선 일정과 국정 수습을 감안해 정했다고 한다. 대체로 합리적인 시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대로 되면 헌법상 60일 이내 치르게 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는 6월 말이 된다. 이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은 친박(親朴)·비박(非朴) 계파 구분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에 찬성 입장인던 비박계는 9일 탄핵안 표결 전에 대통령이 이 당론을 명시적으로 수용하면 탄핵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그래도 야당은 공격할 것이고 촛불 시위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위와 공격은 더 이상 순수한 시민들의 평화적 항의라고 보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퇴진 시기를 명시하면 야당들이 발사 탄약을 발의하더라도 통과할 수 없다. 표결 의미도 없지만 야당들은 '보여주기'라도 해야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넘겨 정치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계산일 것이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퇴진 시기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이 협상에 응하면 대통령 퇴진 시기는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에 협상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탄핵과 대화를 병행할 수 있다고 했으나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자진 퇴진하겠다고 하고 야당이 그 퇴진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야당과 퇴진 시기를 협의하자는데 그것

한국은 물론 세계의 민중 혁명사를 새로 쓸 12월 3일의 서울 광화문 촛불이었습니다. 공치사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외롭지 않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모두 빈 말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나 새누리당 그리고 조선일보, 이들은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 담화를 기점으로 대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지만 4월 대통령직 사퇴까지 선심 쓰듯 약속하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촛불을 소강상태로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스텝 즉 국민을 '순수한 시위참여 시민'과 '직업적 전문 시위꾼'로 편 가르는데 수순이 이어질 테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탄핵 저지, 특검 무력화 전략이 가동될 것입니다. 그렇게 과정을 잘 관리하고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드디어 약속했던 4월이 되면 "임기가 불과 10여개월 남았는데 지금 그만두면 그래서 대선 정국을 앞당기면 국정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탄 소리를 하겠지요?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조선일보, 12월 3일 230만의 민심은 그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아직도 기만과 사술로 충분히 농락되는 무지렁이로 보입니까? 단언컨대 박근혜와 새누리당, 조선일보가 택할 카드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역사에 기여할 마지막 길이기도 할 무질서하고 불명예스러운 즉각적 퇴장입니다.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조선일보 폐간. 이것이 그대들의 남은 선택입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2월 5일(월) 1부 | 벼랑 끝 박근혜, 모레 마지막 꿈수 쓴다

[오프닝] 촛불 끝 꿈수 말고 민심 받들 정수 선택하라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뉴스듣기능력평가] "탄핵 없다" 이정현 뿔로 맹세했다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FT, WSJ에 이어 이코노미스트까지 "박근혜 퇴진해야"

-주한미대사관 소동 파문으로 미국 정부 입장 앞둔다

[경제의 속살] 이원배 민중의소리 기자

-"재벌 견제" 박주민 의원의 특기법 개정안 주목되는 이유

-[월요 경제학] 단순이 복잡 압도 (오컴의 면도날 법칙)

[공화국 논평] 또 말 뒤집은 김무성에 대한 중대 조치

혼돈에 빠진 보수지

朝鮮日報가 ‘박근혜 편’ 들어야 하는 이유

새누리당 비박계가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요? 혼돈에 빠진 조선일보는 탄핵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비박계를 비난했다. 사실 일부다.

“새누리당 당론을 이틀 만에 말을 뒤집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다. 탄핵이든 중도 퇴진이든 박근혜가 임기를 마칠 수 없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 심리가 내년 4월을 넘기게 되면 오히려 탄핵이 박근혜 임기를 더 연장시키는 결과가 된다.” 조선일보가 내년 3월 TV조선 재허가를 내락 받은 것일까? 왜 민심을 거슬러 박근혜의 임기를 4월까지 보장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東亞日報 “반기문 속히 출마 선언하라” 호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헌법에 따라 국정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 탄핵을 지지한 것인데. 이에 동아일보는 반기문 총장에게 어서 와서 보수의 희망이 돼 달라며 읍소하다시피 하고 있다. 사실 소개한다.

“반기문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마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 진영의 주자는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이제는 출마 여부 정도는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다.”

새누리 향한 민심

한국일보 “탄핵 무산되면 여의도 각오하라”

시민집회의 역사를 새로 쓴 6차 촛불집회에서 분출된 민심이 여의도를 향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오는 9일 부결될 경우 “정치권도 각오하라” 것이다. 지난 토요일 2만여명의 시민들은 새누리당사 앞에서 탄핵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여당을 맹렬히 비난했다. 또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표결 하루 전인 8일부터 국회와 새누리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일보 보도, 김용민 브리핑 앞으로 의견 주신 많은 애청자는 국회를 인간띠로 잇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겨레 232만 촛불에 놀란 비박, ‘탄핵 표결’

분노한 민심을 확인한 새누리당 비박계가 ‘대통령 박근혜 4월 퇴진’에서 탄핵으로 이틀만에 태도를 바꾼 것과 관련해 비박계 한 재선 의원은 “민심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탄핵을 막는 집단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박계 이해훈 의원은 “의원들에게 국민들의 문자메시지가 쏟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박근혜의 퇴진 일정 발표 역시 비박계의 탄핵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친박 “어찌 된 일인지, ‘멘붕’이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비박계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한 것에 난색을 표했다. 한 친박 중진 의원은 “우리 당 대통령 말을 불신하면 어찌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다른 친박 중진 의원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며 ‘멘붕’”이라고 했다.

새누리는 완전 박멸이 답

서울신문 朴, 7일 비박 흔들 입장 밝힐 수도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 표결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대통령 박근혜가 네 번째 입장 표명으로 반전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인 퇴진 시점을 밝힘으로써 비박계의 대오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보도, 아, 퇴진 시점 밝혀도 야당 동의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결의까지 했는데, 꼼수 쓰지 말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국민일보 표창원 고소해봤자...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자신의 SNS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새누리당이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국민일보가 만난 법조인들은 “표창원 의원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또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사법 영역으로 떠넘겼다”는 지적도 있었다.

촛불에 특검도 응답

경향신문 박영수 “‘김기춘·우병우 라인’ 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에 대한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영수 특검은 인선과정에서 법조계 안에 있는 ‘김기춘·우병우 라인’을 원천 배제하고 있다. 우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영남출신인 점을 고려해 지역색이 열은 서울 출신을 명단에 대거 포함시켰다.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당시 함께 손발을 맞췄던 이들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의 마지막 관문

한겨레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사실이라면...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10월4일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비공개 회의 발언을 옮겨 적은 비망록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연내 선고’. 청와대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진보당 해산 결정 ‘의중’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간다.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박한철 소장에게 압력을 가했거나. 만약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소장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박근혜 게이트’ 의혹은 계속

東亞日報 장시호, 3차례 학교 맞고도 학교 피해

장시호가 연세대 재학 시절 학사경고를 3번이나 받았지만 무사히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적 등 학사 징계도 받지 않았다. 연세대 학칙에는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경향신문 차의과대 정원 늘리기에 ‘맞춤 특혜’

차병원그룹이 설립한 차의과대학이 교육부의 ‘맞춤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2013학년도 대학 정원 조정 계획’에서 전에는 없던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소재 대학의 경우는 별도신청 없이 증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차의과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해당한다. 바뀐 규정에 따라 차의과대는 2010년 110명이던 정원이 3년 만에 540명으로 늘었다. 차병원이 운영하는 차음의원은 최순실의 단골병원이며 대통령 박근혜의 대리처방 의혹을 받고 있다.

수구세력의 역사 농단

한국일보 경제성장은 재벌 덕? 친재벌 교과서

국정 역사교과서가 재벌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경제 성장이 박정희 정권과 재벌들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처럼 쓰였으며 노동자·농민·소상인 등의 노력은 생략돼 있다. 또한 ‘전태일 분신 사건’은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가 매년 목살되자 1970년에 분신자살하였다”는 한 문장의 사진 설명으로 축소됐다. 이런 서술 변화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낸 건의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머니투데이 국정교과서 검토진도 ‘뉴라이트’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를 위해 위촉한 외부전문위원들이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외부전문위원 가운데 현대사 부문에는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인사가 집중 포진됐다. 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며 '우편향' 논란을 일으킨 한국현대사학회에 몸담았거나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고 폄하한 전력이 있다.

오늘의 칼럼

한국일보 “18대 대선 부정에 눈감은 결과”

오늘의 칼럼은 지난 토요일자 소설가 장정일 씨의 한국일보 칼럼 “18대 대선 부정에 눈감은 결과”이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국가정보원·국방부 사이버사령부·서울경찰청 같은 국가 권력 기관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했던 것만으로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남는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더 잘 안다. 그래서 청와대와 보수언론은 지켜내기 힘든 ‘공정선거다’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대선에 불복하는 것인가”라는 역공을 취했다. 내 한 표가 왜곡 당한 시민, 승리를 도둑맞은 민주당, 부정선거를 논의해야 할 진보(좌파)언론은 이들의 ‘불복 프레임’에 수그러들었다.

‘부정 선거’와 ‘공정 선거’를 가리지 않는 불복은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결과를 트집 잡는 졸렬하고 구차스러운 사람, 어떻게든 놓쳐버린 승리를 다시 빼앗아오기 위해 혈안이 된 몰상식한 사람을 연상시킨다. 나아가 불복은 대의 민주주의의 바탕인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최악의 책동이 아닌가. 청와대와 보수언론이 만든 틀짓기에 포박된 결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박근혜 씨에 반대하지만 이런 몰상식한 발언은 오히려 진보를 해친다”라는 진보 진영의 협공마저 받게 되었다. ‘한겨레’를 위시한 진보(좌파)언론은 ‘보수 세력에게도 칭찬받는 합리적 진보’라는 자승자박으로 이 문제를 외면했다.

18대 대통령 선거일, 당시의 박근혜 후보 선대위 공보단장이었던 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불법선거 운동이 도를 넘어 자행되고 있다, 문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당선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가 주장한 문재인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이 아무런 근거 없는 흠집 내기가 아니었다면, 설혹 문 후보가 당선되었다 라도 당선무효 투쟁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선거 중에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장의 불법 선거개입이 드러났을 때 민주당은 “선거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거나, 선거 후에는 “하야와 재선거밖에는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